"수능 훈수로 교육현장 대혼란 불러"

민주, 윤 대통령 '수능 발언' 공세
"논란 일자 장관에 책임 떠넘기기"
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침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즉흥적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검찰 공화국의 단편적인 예"라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처벌 쪽으로 몰아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쉬운 수능'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제외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말장난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연상된다. 왜 매일 국민들에게 국어시험 보고 청각 테스트도 하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썼느냐를 갖고 잘못 전달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최소한 자문이라도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건 이 정부의 단골 해명이 됐다"며 "논란은 대통령 본인이 초래해놓고 모든 책임은 장관과 주무 부처에 떠넘기는 지독한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듯 뭐 하나에 꽂히면 바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다"며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 발(發)로 나온 건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통령실이) 포장하 다 보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이나 참모들, 관계 부처의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해명, 수습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를 통해 수험생들의 혼란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만이다. 이 원장은 이날 평가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이 원장의 사임은 최근 윤 대통령이 최근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한 뒤 수능을 5개월여 앞두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한 가운데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소속 의원들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국고손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연내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만나 "연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요구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22일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며 "이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다.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찌 됐든 연내까지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연말까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수 있게 최대한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설득해 행안위에서 이 법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잘 안됐을 시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유가족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이고, 이날부터는 단식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정쟁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걸 넘어서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전남 시민사회 새로운 대안 되겠다"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 포럼' 창립
"건강한 보수 통해 호남발전 견인"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 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17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건강한 보수'를 통해 새로운 호남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창립됐다.

이날 창립대회는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일빌딩에 난사한 '245발의 탄환'이라는 상징적 숫자에 맞춰 245명의 광주·전남지역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초대됐다.

창립대회에는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포럼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들은 축사에서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 포럼'의 출범을 축하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대표로는 전우진 전남대교수와 임진석 변호사, 김태석·이봉윤씨가 맡았다.

전주혜 원대대변인은 "내 고향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포럼의 상임고문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포럼의 창립을 통해 광주·전남에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신을 구현해 광주·전남의 이념적 편향성을 타파하고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며 시민사회에 새로운 대안과 동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승남, 어업 피해 보상 20년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9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 피해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됐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07년 장흥댐 건설로 인한 강진만 어업 피해에 대해 조사연구가 있었지만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도는 미비했다"며 "댐 건설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본 강진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철현, 석유화학단지 지역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19일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과 화재 사고, 석유와 유해물질 누출 등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토양·수질·대기 오염에 따라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주 의원 발의한 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장이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 환경 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